

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설명자료

제출자	수석전문위원
-----	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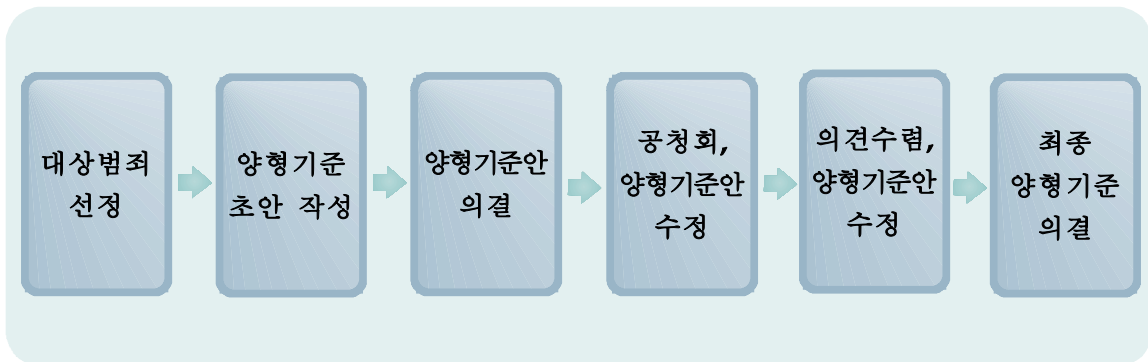
목 차

1. 개요	1
2. 제1, 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선정 경과	1
3.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선정 원칙	2
가. 대상범죄 선정 시 고려사항	2
나. 대상범죄군 분류	2
4. 대상범죄 선정 관련 전문위원단 논의 결과	3
가. 대상범죄 포함에 이견이 없었던 범죄군	3
나. 대상범죄 포함 여부에 이견이 있었던 범죄군	4
다. 대상범죄 제외에 이견이 없었던 범죄군	8

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

1. 개요

- 양형위원회는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를 선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양형기준안 작성 연구를 포함한 양형기준 설정 업무를 본격 진행할 계획
- 전문위원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,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보고



2. 제1, 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선정 경과

- 제1기 양형위원회(2007. 4. 27. ~ 2009. 4. 26.)는 살인, 뇌물, 성범죄, 강도, 횡령·배임, 위증, 무고범죄를 대상범죄로 선정
 - 살인범죄 : 범죄의 중대성 및 양형기준의 상징성 고려
 - 뇌물, 성범죄 : 높은 사회적 관심 반영
 - 강도범죄 :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대범죄인 점 고려
 - 횡령·배임범죄 : 화이트칼라 범죄의 적정 양형에 대한 국민적 요청 반영
 - 위증, 무고범죄 : 신뢰받는 재판문화 정착을 위한 필요 고려
- 제2기 양형위원회(2009. 4. 27. ~ 2011. 4. 26.)는 약취·유인, 사기,

절도, 공문서, 사문서, 공무집행방해, 식품·보건, 마약범죄를 대상
범죄로 선정

- 약취·유인범죄 : 아동 등 소수자에 대한 보호 필요
- 사기범죄 : 사건발생빈도수 1위의 대표적인 재산범죄
- 절도범죄 : 대표적인 국민생활 밀착형 범죄
- 공문서범죄 : 공적 문서에 대한 신뢰 보호 필요
- 사문서 범죄 : 법률적 거래의 안전과 신용 보호 필요
- 공무집행방해범죄 : 정당한 공무집행의 보호 필요
- 식품·보건범죄 :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범죄
- 마약범죄 : 대표적인 국민건강 관련 범죄

3.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의 선정 원칙

가. 대상범죄 선정 시 고려사항

- 양형기준의 목적
- 국민적 관심
- 범죄의 발생빈도
- 제1, 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와의 관련성 등
 - 경합범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확대 도모

나. 대상범죄군 분류

- 제1기 양형위원회는 2009. 7. 8. 개최된 제9차 회의 및 2009. 7. 28. 개최된 제2차 임시회의에서 개별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군 별 양형기준을 점진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
- 대상범죄군 분류
 - 원칙적으로 형법상 동일한 장에 속하는 범죄인지 여부를 토대로 범죄의 본질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31개 범죄

군 및 기타 범죄군으로 분류

[대상범죄군 분류 현황]

강간	강도	강제추행	공갈	공문서
공무집행방해	교통*	근로기준법위반	뇌물	도로교통법위반
마약	무고	방화	배임	변호사법위반
병역법위반	부정수표단속법위반	사기	사문서	살인
상해	선거	손괴	위증	장물
절도	조세	지적재산권	폭행	협박
횡령	기타			

*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특가법위반(도주차량) 유형을 의미
(도로교통법위반범죄와는 구분)

☞ 음영표시된 부분은 제1, 2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임

☞ 기타 범죄군에 포함된 식품·보건, 환경, 약취·유인범죄 중 식품·보건, 약취·유인범죄에 대해서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상범죄로 선정되어 양형 기준 설정 완료

4. 대상범죄 선정 관련 전문위원단 논의 결과

- 전문위원단에서 범죄군 별로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대상범죄를 심의·확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
- 개별 범죄별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음

가. 대상범죄 포함에 이견이 없었던 범죄군

(1) 교통

-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범죄

- 범죄 발생빈도가 매우 높음

(2) 상해

- 폭력형 범죄 중 결과가 가장 중하고, 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
- 성범죄, 강도, 공무집행방해범죄와의 관련성이 높음

(3) 폭행

- 폭력형 범죄의 기본 범죄유형
- 상해, 협박범죄와의 관련성이 높음

(4) 협박

- 폭행범죄와의 관련성이 높음

(5) 공갈

- 재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완결 의미
- 사기범죄와의 관련성이 높음

나. 대상범죄 포함 여부에 이견이 있었던 범죄군

(1) 주거침입, 체포, 감금, 강요

- [1안] '폭력범죄군'에 포함시켜 양형기준을 설정
 -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임
 - 실체적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면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이 용이함
- [2안]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

- 폭력범죄와 범죄의 성질이 다르므로 일괄하여 무리하게 ‘폭력범죄군’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음
- 범죄발생빈도가 매우 낮고, 징역형 선고비율도 낮음

(2) 손괴

○ [1안] 포함

- 모두 폭처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임
- 실체적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면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용이함

○ [2안] 제외

- 징역형 선고비율이 낮고, 범죄 발생빈도도 높지 않음
- 죄질이 중하지 않아 상한보다 하한이 중요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모든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도 설정된 범죄의 하한이 적용되니 충분

(3) 방화

○ [1안] 포함

- 강력범죄에 해당되므로 필요
-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연쇄방화범 등 국민적 관심 고려

○ [2안] 제외

- 사건발생빈도가 매우 낮음

(4) 장물

○ [1안] 제외

- 사건발생빈도가 낮고, 과실범의 경우 벌금형 선고비율이 높음

○ [2안] 포함

- 재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완결 의미
- 고의범의 경우 전문성이 있으므로 죄질 중함

(5) 선거

○ [1안] 포함

- 국민적 관심도와 사건발생빈도가 높음
- 당선무효형 여부에 관한 양형기준의 설정이 매우 중요
- 범죄유형이 다양하기는 하나, 특정한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설정하면 가능함
- 정치적 부담 있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설정을 회피하는 것은 부담

○ [2안] 제외

- 행위유형이 너무 다양하여 일관된 양형기준 제시 어려움
-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벌금형 양형기준을 만드는 것은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 온 양형기준체계와 배치됨
- 형사재판의 결과에 불과한 당선무효가 양형의 고려요소가 되는 것은 부적절
- 총선, 대선 등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간섭 우려 있어 부적절

(6) 조세

○ [1안] 포함(조세포탈 등 일부 범죄만)

- 화이트칼라범죄이므로 설정 필요성 높음

○ [2안] 제외

- 탈세액수만으로 형량이 거의 결정되므로 설정 필요성 낮음

(7) 금융·경제범죄

- [1안] 형법과 특별법상 배임수증재까지 포함
- [2안] 형법과 특별법상 배임수증재 외에 알선수재까지 포함
- [3안] 형법과 특별법상 배임수증재, 알선수재, 자본시장법위반까지 포함

(8) 병역

- [1안] 제외
 - 양형편차가 거의 문제되지 않는 범죄
 - 범죄유형이 매우 다양함
- [2안] 포함(일부 범죄만)
 - 사건발생빈도가 높고, 국민적 관심도가 높음
 - 주요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기준을 설정하면 됨

(9) 부정수표단속법위반

- [1안] 제외
- [2안] 포함

(10) 사법방해

- [1안] 제외
- [2안] 포함

(11) 명예·신용

- [1안] 제외

- [2안] 포함

(12) 지적재산권

- [1안] 제외
- [2안] 포함(일부 범죄만)

다. 대상범죄 제외에 이견이 없었던 범죄군

- (1) 환경
- (2) 근로기준법위반
- (3) 변호사법위반